

## [ 종합·해설 ]

참여정부 전·현직 관료, 지자체 고위 간부, 前 국회의원들…

## 총선 앞둔 지역정가 '거물들의 각축장'

### 물갈이 바람·정치권 사면·복권 등 변수 겹쳐 혼전

18대 총선은 90여 일 앞두고 자천타천의 출마 후보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광주·전남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물갈이론'과 '나자간 경쟁 구도 불가피론'이 이번 총선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광주·전남권에도 각 당의 대표급 인사는 물론 장·차관급 신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진 인사를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세력은 '참여정부 전·현직 고위 공직자 출신 그룹'으로, 현재까지 7~8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고위 공직자 그룹의 선두 주자 격으로, 광주 북갑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

다. 장관은 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수장으로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식 건설교통부 장관은 광주 서구나 광산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국세청장, 전 관세청장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 장관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고위 공직자 그룹'

에서 빼놓을 수 없다. 호남인맥의 대부분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친 전 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끼리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목포나 해남·진도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택 아시아문화종합도시 조성위원장도 '고위공직자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 왔다는 공로를 내세우며 광주 서갑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이 광주 북읍에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여수을),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도 광주 북갑 출마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들의 총선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당 소속으로 강진·안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직을 사퇴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심재민 전 광주시 부시장 역시 일찌감치 광산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그룹도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박주선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을 걸고 광주 동구에 출사표를 내밀었으며, 김경천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에 강운태 전 의원이 또다시 남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지난 연말 사면·복권된 한화갑·박지원·이정일 전 의원들도 국회 입성을 기준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선 통합신당의 물갈이 바람과, 참여정부 최고위 인사들의 퇴진, 그리고 과거 호남정치 중진들의 사면·복권 등 굽직한 변수들이 겹쳤다"면서 "능력이 겸증된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만큼 치열한 혼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민주 특위 구성

#### 인재 영입 나서

민주당은 3일 공동대표주전 및 인재영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출마 인사 영입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인기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신낙균 전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고재득 사무총장 등 당, 학계, 법조계 인사 12명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참신성, 전문성, 도덕성 등 총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로 했다"며 "또 중도개혁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인사들에게 기득권을 뛰어넘어 문호를 개방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작

### 인수위를 보는 호남의 눈



이명박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반응은 기대보다 격정적이 앞선다.

####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인수위 구성에서 영남 출신 인사들이 중庸된 반면,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전문위원과 민간 실무진 등을 제외한 인수위원 76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40명에 이르는 반면, 호남 출신은 겨우 7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34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15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인수위 구성은 출신 지역 등을 안배하기보다는 실무적인 능력을 최우선 발탁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출신보다는 능력 우선의 '실용주의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 아래 지역적 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한,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호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외면받거나 정부 부처에 포진한 호남 출신 인재들의 인사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과거 영남 군사정권에서 빚어졌던 '호남 후대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과거형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호남을 방문, "정책적으로 호남을 배려하고 향후 국정의 일부분을 호남이 담당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광주·전남은 민주화를 뛰어 넘어 호남 번영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 밤, 이 당선인은 갑격에 찬 목소리로 영·호남 갈등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주장했다. 영·호남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지역적 배려를 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인이 내세운 사회통합의 진정성은 이달 25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 및 정부 조각 발표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당선인이 호남 배려라는 서진정책(西進政策)으로 사회통합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실용으로 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과 편향된 인사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tuim@kwangju.co.kr

### 광주시의회 민주 의원 10명 "당 지도부 사퇴하라"

#### 정가동향계

##### 김동신 前 장관 8일 출판회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40년 군 생활을 되돌아본 '군인의 길을 걷다'라는 자서전을 선보일 계획.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합참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을 충점으로 한 40년 군 경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쏟아붓겠다"며 강력한 출마 의지를 피력.

○·김승남(43)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6일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18대 총선 출마 의사 를 표명.

그는 3일 "광산지역은 기존 정치인들보다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 같다"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

○·이재오 전 한나리당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영산강 뱃길 복원

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사랑 선고'를 내렸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만이 외면한 민심을 되돌리는 길"이라고 주장.

이들은 또 "당 대표와 지도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선 참패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실상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

#### 민화식 前 해남군수 출사표

○·민화식(68) 전 해남군수가 오는 제18대 총선에서 해남·진도 지역 출마를 선언.

이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정치인·사회단체 인사들이 3일 '김근태 고문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창출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

민 전 군수는 3일 해남군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군수 임기 도중 도지사로 출마해 군정에 혼란을

일으킨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속죄하는 길은 국회의원이 돼 일로써

보답하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

그는 또 "경선 방식을 채택한 당에

출마해 정정당하게 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투명하지 않은 경선이 진행

된다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생각"이

라고 강조.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3일 당신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쇄신안에 대해 오충일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당 쇄신안 후폭풍 소용돌이

#### 당 대표 '합의 추대'에 경선파 "미봉책" 강력 반발

갈길 바쁜 대통합민주신당이 쇄신안 후폭풍에 흔들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참패 수습용으로 마련된 쇄신안이 오히려 당을 전면적 갈등의 희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쇄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위원회의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진로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신당 쇄신위원회는 3일 당 대표를 합의

추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마련, 최고위원-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주대라는 미봉책으로는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 실질적인 야당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경선만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동영 그룹 일부와 김한길, 천정배, 염동연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주대라는 미봉책으로는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 실질적인 야당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경선만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동영 그룹 일부와 김한길, 천정배, 염동연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주대라는 미봉책으로는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 실질적인 야당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경선만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동영 그룹 일부와 김한길, 천정배, 염동연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주대라는 미봉책으로는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 실질적인 야당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경선만이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주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동영 그룹 일부와 김한길, 천정배, 염동연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최고위

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합의주대라는 미봉책으로는 총선에서 '270대 30'이라는